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2025.06.04

총론

산업, 성장, 밸류업

노동정책(인사노무)

공정거래와 상생, 온라인플랫폼

AI와 개인정보

중대재해·산업안전

에너지·환경

제약바이오

금융정책과 가상자산

조세 및 재정정책

국정 운영(국회, 언론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사법기관 개혁

국제 통상환경 대응



‘이재명 정부’ 출범, 핵심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변화의 속도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4일 취임함으로써 ‘국민 주권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변화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 복원’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집권 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견제를 받아온 이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에는 확실한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등에 업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변동은 곧 산업 정책과 규제 정책, 노동시장, 통상 관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업들은 정권 교체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변화의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심층분석과 동향 파악을 토대로 작성한 ‘이재명 정부 출범, 기업의 대응방향’이 귀사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공식 기구(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어 확정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精)과 성(誠)을 다해 깊이 있는 분석과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편집위원회

우병렬 외국변호사(New York)

권석천 고문

최석림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New York)

김형욱 고문

정경화 변호사

안유진 변호사

Contents

*항목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총론	3
II. 산업, 성장, 밸류업.....	6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14
IV. 공정거래와 상생, 온라인플랫폼	19
V. AI 와 개인정보.....	26
VI. 중대재해·산업안전	33
VII. 에너지·환경	37
VIII. 제약바이오	42
IX. 금융정책과 가상자산	47
X. 조세 및 재정정책.....	55
XI. 국정 운영(국회, 언론 등)	60
XII. 경제부처 조직개편	65
XIII. 사법기관 개혁	68
XIV. 국제 통상환경 대응	78



I. 총론: 기업의 대응전략, 5 대 변수를 주목하라

이재명 정부는 기업 정책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선거 공약은 단순히 공약이나 숫자에 머물지 않고 거시경제와 시장 질서, 기업 지배구조, 투자 환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사후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변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습니다.

1. 기업 관련 정책 실행의 속도 조절, 가능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행정력과 입법권을 동시에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기업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상황 점검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정책 등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행 속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민관 협의와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전략, 어떻게 믹스(mix)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생애소득 보장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집권 시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사회' 정책이 AI 3대 강국 진입·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진짜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불투명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 속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기본 정책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권리 강화의 수위,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진짜 성장' 5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재추진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 강화, 주 4.5 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재검토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의 경영과 인사관리 전략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니다. 경제력 집중 규제와 노동자 권리 강화의 수위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4. 트럼프 행정부와 '포괄 협상',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에서 고율 관세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포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한미간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를 낼 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5. 내란극복과 검찰 개혁,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완성과 함께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정기관의 수사 방식과 기업 관련 분쟁 처리 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사의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개편으로 '수사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의 견지에서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지고 제거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정권 교체의 차원을 넘어 정책 환경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면밀하게 관측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새롭게 균형을 잡기까지 기업은 전략적 유연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 태평양의 각 그룹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준비한 분석과 전망이 고객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II. 산업, 성장, 밸류업



이재명 당선인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가치와 국민소득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이하 민주당의 관련 밸류업 정책과 구체적인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공약

1)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합니다.

- 축적된 잠든 자본(국민자산 2경 3,000조원, 기업 사내유보금 237조원)을 투자로 전환합니다.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안보 이슈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대를 추진합니다.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하겠습니다.
 - (ㄱ)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 조성하려고 합니다.
 - (ㄴ)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 (ㄷ)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하려고 합니다.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보장하려고 합니다.
 - (ㄱ)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ㄴ)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ㄷ)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 (ㄹ)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기존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으로 변화하겠습니다.

(ㄱ) 자금: 모험자본의 적극적 조성·공급, 자본시장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ㄴ) 판로: 혁신제품 공공구매(혁신조달),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ㄷ) 인재: 부족 전문인재 확보지원, 교육혁신 및 중장기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낮은 자본성숙도를 극복하겠습니다.

- 자본성숙도 측정수단인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GDP 대비 공모펀드, 사모펀드, 회사채 등 증권 발행 규모 비중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감소 추세이고,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10.9% 였으나 2022년엔 8.2%로 하락하여 한국시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박스피로 표현하듯이 외면받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 성장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기업주도형벤처케피탈(CVC)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끔 제도를 지원하고,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하겠습니다(2025년 연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 우선배정물량 상향 조정 등).
- 2022년 기준 10대 기업의 유보금 448조를 포함하여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00조원을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활용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주주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 및 위임장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ㄱ)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ㄴ)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ㄷ) 사모펀드,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조합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ㄹ)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 상장법인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시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할 방침입니다(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을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 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각으로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ㄱ)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ㄴ)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5)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혁신 국가'를 기업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ㄱ) 정치적 안정과 법질서 회복을 통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생태계 구축,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정부는 창업과 도전이 보장되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 기업성장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

순번	정책 과제	내용
1	정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제도의 안정성)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정책 로드맵) 주요 경제정책, 세제,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금·노동 개혁, 기후위기·AI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한 합의와 협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집권 초에 국가 비전 전략(가칭: "비전 2050")을 정부-국회-기업-시민단체 등이 함께 수립하여 미래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비합니다.
2	기업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기업 활동 공간 확대) 디지털·수출·해양·우주 등4대 기업 활동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혁신 생태계 지원)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하고, 대학·연구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 합니다. - (정부 구매력 활용)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제품과 정부의 R&D 과제 성과물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혁신기업에 대해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지원 합니다.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 지원 펀드 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합니다. -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5G, 6G 통신망, 클라우드 기술,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기반 확충합니다.

		- (미래 인재 육성)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문 인재를 육성합니다. -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철폐하고, 신산업 및 스타트업에 적합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합니다. - (AI 정부 구축) AI기반 정부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정부의 공동 대응) 현재의 난관 극복과 미래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업-정부 간 Hot-Line을 구축합니다.
3	대외 신뢰 및 국가 브랜드를 회복합니다.	- (외교적 대응 강화) 주요 교역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 (국제사회와 소통 확대) 정부의 개혁 의지, 대한민국의 안정성,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공공-민간 합동으로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 (K-브랜드 이미지 회복) K-컬처, K-테크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합니다. -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의존도를 분산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수출 확대 지원) 미국발 관세 전쟁에 선도적 대응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해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제 표준화 선도) 국제 표준화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합니다.
5	경제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 (기업 자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 투자 지원 확대, 세제 감면, 수출 보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대외 리스크 관리) 급격한 환율,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합니다.

6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의 조화를 추진합니다.	- (노동 유연성)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7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사회안전망) 기업과 국민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 진작을 유도합니다. - (불평등 해소) AI시대와 기후위기 도래로 위기에 처할 소외계층 등 모든 계층에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8	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공정 경쟁) 대기업-중소기업간, 원청기업-하청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 (환경 규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2. 시사점 - '지원 방안은 원칙적, 규제 방안은 구체적'입니다.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기업경영에 새로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기업은 이를 대비한 사업계획,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등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 대응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자사주 소각 및 '쪼개기 상장'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이 추진됩니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보유한다 제한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및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합니다.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초저평가 기업 정리를 추진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저평가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량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무 상태를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5)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방안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SCI 편입의 전제로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ESG 공시 강화, 영문 공시 의무화 확대, 공매도 및 배당 제도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각 기업은 (i)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조기 정비, (ii) 배당·투자 전략 재설계, (iii) 벤처투자 기회 선점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윤성조

변호사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오명석

변호사

T 02.3404.6587

E myoungseok.oh@bkl.co.kr



안현철

변호사

T 02.3404.6541

E hyunchul.an@bkl.co.kr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이재명 정부는 노동정책 분야에서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에 관한 여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만한 것으로 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및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②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 ③ 주 4.5 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④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명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정책이 실현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었고, 해당 노동정책의 실현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입법과도 연계성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및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1) 주요내용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임신·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받을 권리보장 및 각각의 개별 입법을 통한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기업 등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하여 위장도급을 하거나 근로자성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추정” 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을 명확화하고, 기업 등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권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사점 -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미 22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업자가 일터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개별 노동관계법률상 차별 금지 조항에 비추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전 영역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강한 보호와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함으로써,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범위가 all or nothing의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체계와 맞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노무제공자의 고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추정” 제도를 실제로 도입할 지에 대하여는 향후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 측에서는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성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노란봉투법)

1) 주요내용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서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간접고용 관계에서 하청노동자 등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제도화하고,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의무자(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2) 시사점 -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

민주당은 집권 이후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집권 1년차 대표 과제로 신속하게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상황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가 개정되어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계약당사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사내하도급, 위수탁관계는 물론 자회사 관계에서도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청으로서는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하청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교섭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안건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가 판단될 필요가 있고, 각 안건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가 개정되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예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원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됨에 따라 노사대등의 원칙이 침해되고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3. 주 4.5 일제 추진

1) 주요 내용

민주당은 중앙공약집에서 주 4.5일제 추진에 관하여,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2) 시사점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 전환 예상

민주당은 2025. 2. 노동정책 토론회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임금삭감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5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약집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 없이 실근로시간에 단축 로드맵 제시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었는데,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새로운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한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경주할 필요가 있고, 그간 개정 논의가 있었던 유연근무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1) 주요 내용

민주당은 중앙공약집에서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명문화에 관하여, 장시간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를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및 기업지원,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시사점 - 입법을 둘러 싸고 논쟁이 상당한 예상됨

포괄임금제는 실무 관행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정액급제,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포함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체로 합니다.

한편 포괄임금제와 별도로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고정OT 제도가 널리 활용됩니다. 고정OT 제도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정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고정OT를 지급해야 하며,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고정OT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판례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까지 규제하는 결과가 될 경우 입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까지 금지하거나 고정OT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입법 이전이라도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즉 공짜노동이 없도록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현행 판례상 유효한 포괄임금제까지 금지하거나 고정OT를 규제할 경우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 폐지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 측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개별적·변동적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업무의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업무,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의 범위와 측정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김상민

변호사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박화진

고문

T 02.3404.0648

E hwajin.park@bkl.co.kr



박은정

변호사

T 02.3404.0598

E eunjung.park@bkl.co.kr

IV. 공정거래와 상생, 온라인플랫폼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확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 제고, 대기업 내부거래, 사익편취,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가맹점주·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 등록 및 협상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맹본부, 플랫폼사업자, 하도급 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사업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계약 구조 및 조건, 협상 방식 등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내부통제 및 거래조건 산정 기준 마련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생 생태계 구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술탈취 근절

1) 주요 공약 사항

‘기술탈취 근절’ 공약에서는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의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 안전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기술탈취 근절’ 공약은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원칙은 하도급 정책 및 법 집행의 강경 기조를 상징합니다. 향후 기술 유용이나 탈취가 발생할 경우 각종 평판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 조달 배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술탈취와 관련된 다량의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다른 각종 하도급법 위반 자료들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기술자료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정비 필요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준수하고 필수 서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보유하게 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접근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및 지원 확대는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소송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향후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어 비용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원사업자들은 평소 기술자료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기술자료 관리체계의 강화, 사전 법률검토,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재정비 등을 통해 본 공약의 정책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받아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고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우수 등급 이상 시 직권조사 면제) 전략도 필요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1)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법제 구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여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선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처리 제도의 도입,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조치, 정부 보고, 장애 원인 고지 등 의무화, △국가적 참사,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 보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재 수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앱결제 강화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앱 시장의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배달 시장 규제 강화

배달시장에 관해서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방통위·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사회안전망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배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안전 배달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됩니다.

4) 시사점

이재명 당선인의 2025년 대선 공약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 기업뿐 아니라 입점업체, 유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플랫폼의 지위 남용 금지,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 입점 계약조건, 검색·노출 알고리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및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사업자 역시 한국 내 사업활동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한국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반영한 별도의 거래조건 내지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국내법 위반 리스크 점검과 함께 규제당국과의 협의 채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앱 시장 사업자에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 요구와 외부결제 차별 금지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앱 시장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층 강화된 규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인앱결제 규제가 포함된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결과 최근 외부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아마존, 스포티파이 등의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앱결제 구조에 의존하던 사업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구조의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개, 차별적 대우 방지 등의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배달비용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배달수수료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상생안에 관한 논의는 타 플랫폼에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종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배달앱 규제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중개 플랫폼은 계약 구조 및 수수료 체계를 사전에 재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제 체계의 통합에 따른 감독 권한 재배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구조를 갖추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갑을 관계 –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1) 주요 공약 사항

갑을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약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우려를 불식하고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하여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정책 방향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2) 시사점

이재명 당선인의 2025년 대선 공약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상대적 약자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본부, 원사업자, 플랫폼사업자는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면, 중소기업들의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가격 인상 요구나 조건 개선 요구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구매 전략, 공급망 관리,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협상 환경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납품대금연동제 강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비용만 연동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에너지요금 등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와 에너지 등 주요 비용 변동 시 납품대금이 조정되므로, 비용 상승 리스크 관리와 계약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i)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ii)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어 계약하는 행위, (iii) 90일 이내의 단기로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에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탈법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탈법행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부과 등을 통한 비용 전가가 금지됨에 따라, 가맹본부, 원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단가 설정, 물류비·광고비 전가 등 비용 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도 구입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된 한층 강화된 규제 내용 및 제재 수단이 포함된 법령 개정이 예상됩니다.

넷째,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단체 등록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기업(가맹본부, 원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은 해당 단체와의 공식적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실질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체협상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일대일 계약 중심의 거래 구조가 집단적 협상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협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협상권이 제도화되면, 가맹본부, 원사업자, 플랫폼사업자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책 시행 시 원재료 가격, 광고비, 계약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와 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기존의 일방적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별적 가격 적용, 비용 전가, 구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가맹점주, 입점업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 트렌드 반영의 어려움, 분쟁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협상 주체가 다양해져 실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단체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등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 주요 공약 사항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공약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기업 합병, 인수 시 공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수,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정가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가격이 공정가액에 부합하게 산정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일반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 경영권 분쟁 등이 문제되는 대기업 집단 위주로 강도 높은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종래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즉, 위법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공정위의 심결 및 조사 동향에 주목하고 신(新) 유형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V. AI 와 개인정보

이재명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약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AI 거버넌스 정립,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등 크게 5 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 제도 정비, 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의 균형적 추진이 강조되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AI 관련 인프라와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R&D 참여, 데이터 활용 전략,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인재 확보 방안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기술 개발 지원 및 투자를 통한 AI 인프라 구축

1)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산업별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을 추진 및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AI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거대언어모델 및 소규모 언어모델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술과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X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 + 클라우드 바우처 + AI 창작 도구·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AI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AI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No.1. AI Hub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형태(SPC)로 세계 각국의 인재를 영입하여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겠으며 국내 AI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AI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AI공동투자기금을 마련하겠으며, 협력국 간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화하겠으며 AI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의 사용화를 추진하겠으며, 저전력·고성능 NPU, PIM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포함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 총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를 구축하겠으며,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요소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간 자산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 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공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AI 기술을 악용한 피싱, 스미싱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스미싱 근절을 위해 문자중계 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실생활 속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양방향 스마트 안심번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포함됩니다.

4) 시사점

AI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와 AI인프라의 구축은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과 기조라고 보이며 그간 공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주제였던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AI 생태계 마련과 확장을 통하여 기술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GPU기반 데이터 센터와 AI고속도로의 구축 등 인프라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련 예산의 마련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데이터 활용 활성화

1) 손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주도로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겠으며 방송사 데이터의 구매 및 가공 후 인공지능 Hub에 공개 등 멀티 모달 AI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며, 정보의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제, 표준계약서, 학습데이터 익명제 도입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또한 추진할 방침입니다.

2)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기능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합성·변조한 생성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개인정보보호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의 책임 있는 데이터의 이용 구조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충분한 학습 데이터 확보라는 제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거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상용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상향, 삭제요구권 도입, 가이드라인 강화 등은 기업 내부 준법체계의 정비와 대응 인력의 확충을 필요로 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공데이터 등 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학습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히 합성 정보에 대한 침해 대응 체계, 삭제요청 처리 절차 등 새롭게 제시될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기업 내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개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여 기술 개발과 규제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규제혁신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1) 공공SW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W 수요 예보 제도 도입, 일방적인 과업 변경 금지, 합리적인 사업 대가 산정 체계 구축, 공공SW 개발단가 및 유지보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국산 SW 육성 및 SW 중소기업 보호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공약에 포함됩니다.

3) 시사점

SW 수요 예보제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자나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일방적 과업 변경 금지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SW 사업 대가 산정, 공공SW 개발단가 및 유지보수료 현실화는 과거 '저가 수주 → 부실 개발 → 유지보수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정상가격 기반의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저가 경쟁에 밀려 탈락하는 '역선택' 현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촉진형 경쟁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SW 시장 참여 기업에게는 과업 변경에 따른 리스크 감소, 적정 대가 보장 등으로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중소 SW 기업의 경우 수익성 개선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은 민간 기업 간 거래나 민간 발주 관행 개선에도 간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시장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대기업에게 공정한 거래행위 준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업 변경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 강화, 적정 대가 지급과 함께 책임 있는 과업 수행 등 책임 있는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SW 시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외산 SW 선호, 규제 불균형 등으로 국산 SW 및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공약은 공공시장 진입 확대, 규제 합리화, 기술보호 지원,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출 전략 강화, 기술보호 역량 확보, 정책 변화 모니터링, 신산업 트렌드 대응 등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4. 거버넌스 정립

1)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AI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할 'AI 전략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3개 분과)을 중심으로 시행령 조항 별로 초안의 세부내용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 제거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하위법령을 조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범국가적 AI 전략기구 설치 공약은 우리나라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최고위급으로 일원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며, 부처별로 분산됐던 AI 정책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교육·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위급 전략기구가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AI 인프라 확충, 데이터 개방, 규제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는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등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이 공약으로 등장한 만큼 하위법령 제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구체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AI 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가 확정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자체적인 AI 운영 및 관리 거버넌스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인공지능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AI 해외 인재 유치 및 R&D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AI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AI혁신 및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직무 수행자를 활용하여 AI-SW 교육 전문강사를 보강하고 재직자의 교육활동 허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교육을 강화하여 AI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아직 글로벌 탑티어의 AI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우수 인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AI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정비 및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에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는 AI인력을 양성하거나 영입하여 해당 인재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의 확보와 투자를 준비하고, 관련하여 AI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I인력이 기업에서 AI 기술개발 및 활용을 함에 있어서 윤리기준이나 법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제도적 정비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이강혜

변호사

T 02.3404.7454

E kanghye.lee@bkl.co.kr



VI. 중대재해·산업안전

민주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확보,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 하에 생명안전 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및 이에 수반되는 안전 확보 의무 강화 측면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확보

1)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집행하고,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변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1조 2인 이상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도급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확대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미 실시한 사업장에 벌칙을 도입하는 등으로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3) 건설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불법고용을 방지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업무상질병 중 일부 질병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재확인되었듯이,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중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무직 위주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가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병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빈도가 높은 사업 영역일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다수 발생한 침수, 싱크홀 사고, 붕괴사고 등과 관련한 맞춤 대안, 정책 집행으로 인해 기업의 대응 노력을 위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 확보, 도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사업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이나 AI산업의 성장을 추구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동시에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의무 강화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중대재해/산업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 체계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보다는, 기술지원이나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정책 및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권 초기 정책 마련의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적 재난 대응

1)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지휘권을 강화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2) 화재 안전 장비를 확대하고, 최신 소방장비를 도입하는 등 소방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보강할 예정입니다.
- 산불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소방 항공기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를 도입,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3)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4)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속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등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신호등(GHS 심볼 및 경고문구) 적용으로 유해성 정보 전달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주변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독성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화학물질의 근로자 노출 위험 관련 물질평가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학물질 내지는 환경오염 기여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의무사항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관련 의무 위반 기업이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안전 관련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는 R&D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이형석

변호사

T 02.3404.0145

E hyungsuk.lee@bkl.co.kr



최진원

변호사

T 02.3404.0944

E jinwon.choi@bkl.co.kr



김영민

공인노무사

T 02.3404.0693

E youngmin.kim@bkl.co.kr



VII. 에너지·환경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주요한 구조적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고
②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원믹스 개편**이 예상되며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③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송전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이
제시되어 전국 단위의 전력망 재설계가 예고되었고 ④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기업의 입지 전략과 전력비용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1. 기후에너지부 신설

1) 주요 내용

이재명 당선인은 에너지 및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 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기후 문제에 관하여 국무조정실과 유사한 정책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전력 수급, 석탄·석유·가스 자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과 환경부 일부 기능(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배출량 관리,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 기능은 ‘산업통상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시 에너지 분야의 기술·산업 전문성과 환경 분야의 규제·협약 전문성을
융합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전원믹스, 전기요금, 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등)과 탄소감축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이재명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
중 하나로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규제 일원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일부 있으나,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의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른 규제강화 가능성이 병존합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출범 초기에는 기후 관련 정책에 보다 무게감이 실릴 가능성이 높으며, 재생에너지 의무화, 탄소중립 정책 및 RE100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원별 입장

1) 주요 내용

-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의 발전원믹스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원자력, LNG 등 다른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과도기적 발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생에너지:**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해 지역 참여를 유도하고, ESS와 스마트그리드 같은 기술을 결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원자력:** 원자력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계속운전 및 수명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대형 원전 건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 기술 등 미래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석탄:**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2025. 5. 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i)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 (ii)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iii)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 **LNG:** LNG는 석탄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 발전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사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제 트렌드에 부합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로 평가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에는 RE100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군에는 투자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서는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AI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동반하는 산업 육성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 및 속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PPA 체결, ESS 설치 등 탈탄소 기반 설비 확보와 함께, SMR, 수소 등 신기술 연계 투자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에너지고속도로

1) 주요 내용

이재명 당선인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송전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과 이를 연계한 해저송전망 개발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해안에 2030년까지 20GW 규모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송전망을 연결하고(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전 국토를 U자로 해저 전력망으로 잇는다는 청사진(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을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호남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30년까지 호남권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권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을 완료한다는 공약입니다.
-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전남·경남)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를 구성하고,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구축, 해당 지역에 RE100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며, 한반도를 둘러싸는 U자형 해저 송전망을 2040년 완공 목표로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2) 시사점

송전망 확충은 에너지전환의 핵심 기반이나, 해저 HVDC 구축 등은 공사기간이 길고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임기 내 가시적 성과 도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송전망 문제는 발전과 달리 지자체와의 조율, 토지수용, 주민 민원 등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 정책 이행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병존하는 상태입니다.

기업에는 송전 인프라가 확보될 경우 에너지 가격 안정성 확보, RE100 참여 확대, 지역 내 제조 기반 유치 가능성 등 기회 요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요 산업단지 인근

송전계획 현황을 분석하고, RE100 전략에 연계한 입지전략, PPA 구조 분석 및 참여계획 수립,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역별 차등요금제

1) 주요 내용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5. 16. 전라남도 군산시 유세에서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이상하지 않나”,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등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선인은 5. 18.자 TV 토론에서 “(차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 지역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차등요금제를 지역균형 발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 시사점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유치 촉진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 간 역차별 논란, 정산 구조의 복잡성, 정치적 반발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당선인과 민주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도입 과정에서의 구체적 기준 설정과 이해관계 조율 방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낮은 지역(예: 전남, 제주 등)에 데이터센터나 제조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운영비 절감과 ESG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지만, 수도권 등 기존 입지 기업들은 비용 상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전력 비용 구조를 재분석하고, 입지 다변화 전략 수립, RE100 대응을 고려한 지역 이전 여부 검토, 장기 요금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중장기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관련 전문가



이광민

변호사

T 02.3404.6452

E kwangmin.rhy@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New Jersey 주) 변호사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VIII. 제약바이오

1. 정책 기초

이재명 정부는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비전하에 ABCDEF(A – AI, B – 바이오·헬스케어, C – 콘텐츠·문화, D – 방위산업·우주항공, E – 에너지, F – 제조업)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중 바이오·헬스케어 신사업 집중육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재명 당선인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건산업 정책

1)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의약품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또한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도 추진합니다.

2)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제약기업들의 지속투자과 혁신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3) 필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이 확대될 전망이며,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지급화 기술개발이 적극 지원될 계획입니다. 국산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국가필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며, 수급불안 필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4)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강화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국격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보건분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협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확충으로 건강정보 자기결정권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며,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로 상호연계와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료분야 AI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6)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 마련, 유통구조 선진화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기기 간납제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7)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위한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분야로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신사업 집중육성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바이오 특화 펀드, 전문인력 집중 육성과 더불어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전체조건으로서 의약품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약가관리제도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올리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제약기업이 일정 부분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전략적 R&D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관련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에서도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강증진 정책

1)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희귀·난치질환 대상 의약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및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적극 대응을 위한 등록·통계관리 고도화와 실태조사 확대도 병행될 것입니다.

2)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1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가 지정되고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련 학교·지역사회 인식향상 교육·홍보도 확대합니다.

4) 건강보험재정 안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확립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리수술,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을 억제하고, 재정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5)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장 확대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를 강화하고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항체 건강보험 적용과 청소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중·고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6)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한 질병에 대한 국가검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전립선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 시사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 특례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암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5%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질환으로 지정해 산정특례를 적용될 경우, 연속혈당 측정이나 자동인슐린 주입기기 등 치료비 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병원은 전체 환자수 대비 중증 난치질환 비율 관리 때문에 그간 1형당뇨 환자 진료를 기피해왔으나, 이제 1차 당뇨환자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건의료 정책

1)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구' 신설

이재명 정부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인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약할 수행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2)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인력 확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및 교육·수련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 통합적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여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체계 및 진료권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성 평가 및 개선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도 강화될 계획입니다.

5) 시사점

의정갈등이 지속화되어 새 정부의 당면과제가 된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인력 확보,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이 공약으로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사단체 등과의 협의상황에 따라 해당 공약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송영주

고문

T 02.3404.6595

E youngjoo.song@bkl.co.kr



안효준

변호사

T 02.3404.6409

E hyojun.an@bkl.co.kr



백지욱

변호사

T 02.3404.0958

E jeewook.baek@bkl.co.kr

IX. 금융정책과 가상자산



전제적으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 주도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산업정책 주도로 방향 전환을 예고하면서,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금융산업으로 보기 보다는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일반주주/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에게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 비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표방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겠습니다.

1)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해당 금융사고와 관련된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responsibility map)를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제도를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3)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를 근절하겠습니다.

-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에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분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고위험 & 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 시사점 - 책무구조도를 비롯한 다양한 책임 추궁 장치에 대한 입체적 대비가 필요함

금융지주회사의 거버넌스 문제(소위 지주 회장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문제 포함)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공식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그 대신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 마련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보안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확보위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므로 정보보안사고에 대한 주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 오류 발생 시 보수환수제 도입 내용이 있으므로 CFO/CEO의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과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은행(금융상품 판매회사) 임직원의 KPI의 구성문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은행 검사를 준비함에 있어 KPI관련 사항 및 고위험상품 판매관련 한도설정 등 단기 실적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금융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다중사기범죄 등 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 판결 시 범죄이익의 몰수/추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불법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현재 2천만원 이하)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 불법 리딩방 등 지능화, 복잡화되는 미등록 유사수신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사기신고 이력 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사기, 횡령, 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주요 전과기록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PEF 또는 투자조합을 불법적인 우회인수, 차명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PEF, 투자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한국형 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조성하여 자본시장 피해자의 손실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업회계와 비영리법인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그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의 법률적 효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소액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5) 시사점 – 더욱 강력해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가 요구됨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범죄 근절과 관련한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들에 대해 상당한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에 금융회사가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계좌 은행간 정보공유 통합프로세스 구축 참여 등 금융범죄 예방에 관한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대선 공약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와 민간인의 감독당국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실시가 예상됩니다. 이미 각 금융회사들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조직과 인력이 있지만, 정부의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채무조정부터 채무 탕감까지 코로나 사태 당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 가계 등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 FinTech 기반으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예컨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하고,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해 특별감면제를 실시하고, 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의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외지역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점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거래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미흡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비금융정보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정책모기지대출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요소가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3) 시사점 - 실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부사항까지 점검하여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임

서민 및 포용금융 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 금융정책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매우 detail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량한)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포함), 대출수수료 인하 등 제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 등 금융회사(생산자)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push가 과거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도 1)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2) 대출관련 수수료 등 제반 은행/비은행 수수료 관련 규정, 3) 가산금리 등 금리산정관련 내규, 4)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채무조정관련 실무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대비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딥테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벤처투자 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컨대,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Corporate Venture Capital(CVC) 제도를 활성화하며,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노력하겠습니다.
- 바이오특화펀드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주식시장의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제도를 재편하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의 단계적 대형화를 통해 수익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환매청구권 도입 등 IPO 초기 과도한 일반투자자 손실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예컨대, 2025년 연말에 종료예정인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우선배정물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3) 시사점 – 금융의 지원 역할이 커질 첨단산업 관련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함

벤처 등 새로운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금융자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투자/벤처 투자 허용 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민주당 정권의 모험자본 관련 정책은 큰 무리없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부동산PF 등 전통적 금융자산이 첨단산업 지원 쪽으로 보다 많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영업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기술기업 투자,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내규 등을 재점검하고, 모험자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위에 적시된 주식시장관련 제반 제도개편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상품개발과 영업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디지털자산 허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에 발 맞추어 신규 서비스 제공 준비와 더불어 내부통제, AML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고도화 등 제반 제도 정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민간중심으로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해 블록체인 특별구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과 그 연계상품을 제도화하고, 안전한 투자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유통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의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토큰증권(STO)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에 대하여 STO를 통해 제도권에서 거래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STO의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유동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제반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4) 시사점 - 경쟁의 파도 속에서 역동적인 기회를 제공할 새로운 시장이 다가올 것임

디지털자산 허브 정책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뿐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의안 및 정부(금융위원회)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각 법안별로 가상자산업 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자산운용업 등 현재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추가로 신설될 수 있는 가상자산업 유형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특별구역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혁신성과 효용성을 갖춘 신규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더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자산 관련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그 간 가상자산업계의 숙원사업이던 ①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② 가상자산 발행(ICO) 조건부 허용(검토), ③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④ 토큰증권 사업 활성화 등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물 ETF 출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허용될 경우 그간 금지되었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드디어 허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물 ETF의 경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의 실제 구조 설계, 적절한

파트너사와 제휴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은행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블록체인과 지갑 관련 보안 시스템을 사전에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존재하는 가상자산업 관련 규제들을 시스템 설계 시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법제화 역시 전통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금융회사들은 스타트업 또는 핀테크 업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인하 유도의 경우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므로 추가 인가 등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



노미은

변호사

T 02.3404.0656

E mieun.roh@bkl.co.kr



김호진

변호사

T 02.3404.0695

E hojin.kim@bkl.co.kr



김효봉

변호사

T 02.3404.0985

E hyobong.kim@bkl.co.kr



X. 조세 및 재정정책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 대 비전을 바탕으로 15 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1)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2)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3)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4)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5)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은 '성장' 및 '행복' 비전의 세부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복지 강국'에 관한 세부 정책에 해당합니다.

1. '경제 강국'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1) 주요 정책 내용

- 주력 제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최종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이재명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이재명 정부는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50~100%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상향하고,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성장’ 비전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대선 공약에는 미래전략산업 중 일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정책만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공약 1번으로 “경제 강국”을 내세우면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바 있고, 과거 정부들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은 국내생산 및 제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정책의 목적 및 취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이재명 정부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문화 강국’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1) 주요 정책 내용

- K-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확대

이재명 정부는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며, 2025년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이재명 정부는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K-팝, K-드라마, K-웹툰 등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콘텐츠 제작 및 제작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아래와 같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과 유사한 취지에서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상은 주로 내국인 인력이 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것
- (2) 다음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

나아가, 국내 OTT 시장의 경우 해외 OTT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그 최대 수혜자는 해외 OTT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OTT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OTT 플랫폼 사업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은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복지 강국'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1) 주요 정책 내용

- 소득세 체계의 가족친화적 개선

이재명 정부는 '부부단위 과세표준'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 또는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소득세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부부단위 과세표준'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녀의 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세 과세체계 전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이재명 정부는 자녀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하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방과 후 체육시설 등 예체능시설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시사점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로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표명하였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복지강국' 관련 세제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현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들이 정책의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단위 과세표준'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써, 과세표준 및 각종 비과세 공제항목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면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실질적인 감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 과세체계의 전환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



유철형

변호사

T 02.3404.0154

E cheolhyung.yu@bkl.co.kr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박창수

변호사

T 02.3404.7659

E changsoo.park@bkl.co.kr



XI. 국정 운영(국회, 언론 등)

현재까지는 '주요 공약' 형식으로 골격만 제시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정책 기초

당선자가 국회 개혁 관련하여 공약으로 특별하게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헌법 개정 사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은 법률이나 예산의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의 공약은 헌법 개정안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당선자가 제시한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15대 핵심 정책공약 중 여기서는 '회복' 비전에 제시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된 정책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4연 연임제 도입 등 헌법개정 사항, 국회경비대 국회 직속화 등 국회 관련 사항, 방송 및 언론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공약사항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것이고, 특히 방송 및 언론 개혁 공약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방송사의 governance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헌법 개정 사항에 관한 공약

1) 불법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 방해 금지와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엄해제로 간주하고, 계엄 관련 사항의 국회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을 시도하거나 정치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계엄포고령 위반등을 하여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여 반헌법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 그 계엄은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3)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민에 의한 심판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단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총리 추천제 도입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현행 대통령 추천으로 국회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절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정 운영 차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5)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및 강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정치적 논란을 종결하고, 현행 헌법 개정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의 기본권을 추가하거나 그 내용을 보완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것입니다.

6) 시사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총리 추천제 도입, 국민소환제,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전문 관련한 논의는 그 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계엄해제권 원활한 행사 관련한 사항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한 다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헌 일정 관련하여 당선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간 평가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현행 헌법의 여러 제도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헌 의지가 계속 유지될 지 여부는 대내외적인 환경, 정치적 상황, 국민들의 개헌 공감대 형성,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국회 관련 공약 사항

1)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

국회 외곽의 경비는 행정부 소속인 경찰에서 맡고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 때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직속화를 통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화 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 강화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벌과금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침입니다.

3) 시사점

국회경비대의 독립화 관련 논의는 국회 내부적으로는 있어왔지만,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대 인력 충원이나 국회 경비대의 독자적 국회경비 수행 능력의 유무, 행정 비용의 문제, 입법부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제도화되더라도 실제로 작동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4. 언론 개혁 관련 공약 사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3인,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 3인,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여당측 인사가 다수이고, 운영 또한 여당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위원은 추천을 하는 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제도 전면개편과 함께 법률상 제한 이외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치적 악용 차단을 위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분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정파성 극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원 구성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공정성'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실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상파 3사(KBS, MBC, EBS)의 이사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의 구성 인원을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방송관련 학회나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 중립 의무를 강화를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방송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관련하여서는 노·사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방송 등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공적 지분 보유 또는 공적 자금 지원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며,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 하려는 것입니다.

3) 시사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약은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여당측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약이 그 결실을 이룰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약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이사의

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파에 유리하게 이사 구성이 될 것으로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XII. 경제부처 조직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언급하면서 그 외의 기존 부처는 대부분 유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없이 출범했고, 국내외 경제 현안이 산적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재정,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논의되고 있는데 에너지·환경 챕터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1. 기획재정부

1) “경제정책” 및 “재정” 기능 분리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등을 담았습니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시켜 보면 이는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를 2개 부처로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이행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재정(예산) 담당부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시사점 - 정책조정 기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및 책임행정 노력 필요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정책, 예산, 세제, 국제금융, 대외경제, 국고 등 넓은 범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처럼 2개 부처로 분리된다면 과도한 권한집중 논란은 해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가 아닌 일반 부처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고(다만, 아래 “2.”항에 설명했듯이 부총리 부처의 지위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경제정책 조정, 규제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권은 기획재정부의 정책 조정역량을 뒷받침했는데, 이를 상실한다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가칭)재정경제부의 정책 총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개선할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정책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정책조정 기능의 대부분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직접 수행해야 할 것이고, 중대 사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할 경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

1) “정책” 및 “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 업무를 소관하는데 ‘정책’ 기능은 금융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경향이 있는 반면 ‘감독’ 기능은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립적 성격의 업무가 같은 조직에 있다 보니 모두 미흡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정책공약집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독범위 확대, 감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 대폭 강화”를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금융위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개편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검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경제정책’ 담당부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한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국제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을 동일 부처가 담당하게 되고, 그 위상을 고려하여 부총리 부처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이관되더라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재조치 등을 담당할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금융감독처분 중심의 부처가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처는 경제정책 담당부처의 산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별도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시사점 – 전향적 정책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강화될 감독에 면밀하게 대비

‘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각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제정책 담당부처가 국내 금융정책까지 소관한다면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핀테크, 가상자산 등 분야는 그동안 필요로 했던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감독' 기능도 강화되는 만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 기업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던 만큼 각종 금융소비자 관련 규정, 집행에 관한 면밀한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0255
E youngmo.kim@bkl.co.kr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eol.woo@bkl.co.kr



경기동

변호사
T 02.3404.5852
E kidong.kyeong@bkl.co.kr



XIII. 사법기관 개혁

검찰 개혁

민주당 정책공약은 3대 비전('회복', '성장', '행복') 15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복' 비전의 첫번째 주제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통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양대 권한의 분리를 축으로 하여 수사권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소권에 대하여는 사법통제를 실질화 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인사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검사의 선발과 면직에 중점을 두어 '징계 파면제 도입', '경력 법조인만으로 검사 선발'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는 네가지 검찰 개혁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1) 주요내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25. 4. 15.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출연)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뭉쳐있으면 남용되는 게 권력의 본성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25. 4. 25.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 발언 중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관하여 공약집은 '분리' 원칙만을 천명할 뿐, '공소청' '수사청' 등 기존 검찰의 조직 변경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는 검찰에서 분리될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전문 영역의 수사를 분장함과 아울러 경찰, 공수처의 수사 기능도 고유의 위상에 맞게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중요범죄 수사청', 금융, 마약 등 분야별 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기존에 논의되었습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심층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공약 발표 단계에서는 일단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입법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사점 – 수사·기소의 분리에 따른 '수사 경쟁' 등 각종 리스크 대비 필요

아직 공약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기존에 논의되던 민주당 방침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별도의 수사기관이 신설되고, 전문성 확보라는 방침 하에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의 활동도 강화될 경우 자칫 수사 기관간 경쟁으로 이어져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 리스크 대응에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강구되겠지만, 관할과 업무의 중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관간 효율적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중복 수사의 우려는 상존할 것이므로, 평소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예방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1) 주요 내용

수사절차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②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 입법화, ③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④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 초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구체화되었으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의 반대 등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수사절차법에 담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 입법화'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각종 규범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3. 11. 1. 시행)'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강화'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 전례가 거의 없는 등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 '홀리기 수사'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처벌 대상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 뿐만 아니라 유포, 누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금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개선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도입)' 공약은, 2024년 1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위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벌인 직권남용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규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수사 관행과 실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위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압수수색 남발,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언론에 피의사실이나 수사정보 홀리기 등 특수 수사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성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 입법 시 수사기관의 위축과 수사업무 기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행과 실무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1) 주요 내용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집에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를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로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약집에서는 위 공약 중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등 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관련 기재는 제외하고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 부분만 명기하였습니다. 아직 이 공약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기소 행위 자체가 사법통제인 재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통제의 실질화'의 구체적 의미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소권 남용이 명백한 기소에 대하여는 기존의 형사재판 심리 방식과 다른 절차를 강구하는 등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주제로 보입니다.

2) 시사점 - '끼워넣기식 기소' '트럭 기소' 등에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될 듯

그간 명백한 공소권 남용 행위 뿐만 아니라, 증거관계가 명백치 않거나 사소한 사항임에도 '전부' 무죄 방지를 위한 '끼워넣기식 기소',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 제출로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장기화하는 속칭 '트럭 기소'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큰 틀에서 '공소권 남용'의 범주로 논의되는 다양한 행태에 대하여 법원의 통상의 심리절차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과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 확대

1) 주요 내용

민주당은 검찰 인사, 특히 검사의 임면에 관하여 위 두 공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제 도입 공약은, 현행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이므로 검사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 선발 방식 관련 공약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시스템을 바꾸어 법관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처럼 경력을 갖춘 법조인만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시사점 - 검사 징계파면 등 놓고 여야의 의견 대립 심할 듯

검사가 파면될 경우 그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해임의 경우는 3년) 등 파면에 따른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검사의 신분보장이 약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한 공정한 징계시스템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상당수가 검사로 바로 임용되고 있는 바(2022년 67명, 2023년 76명, 2024년 93명, 2025년 90명), 인사 정책의 급격한 변경이 로스쿨 시스템 및 검사 인력 수급 등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고려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개혁

민주당 검찰·수사구조 개혁안(案)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이와 연동한 경찰청 개혁에 대해서는 10 대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후 발표된 세부공약집에서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검찰 개혁이 경찰 조직에 미칠 가능성을 전망하고, 공약집에서 제시된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 개혁에 따른 수사 구조 변화

1) 검찰청 수사기능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위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남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검사조직이 아닌 수사관 조직으로 신설됩니다.

2)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강화

공수처는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고위직을 사건 관할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을 모든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권 부여와 함께 중앙지검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 사법경찰관의 사건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검찰·수사구조 개혁안(案)은 지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청에 이양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경찰청 독립성 확보

1)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검찰국을 모델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되돌리는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 경찰국 폐지를 경찰청 개혁과제의 1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2) 경찰위원회 실질화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국 폐지와 연동하여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공약했습니다.

3. 시사점 – 설부른 예단보다는 국정과제로 구체화되는 과정 주목됨

현재로서는 경찰에만 적용되는 개혁 방안은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에 집중되어 있고, 검찰개혁이 경찰청 개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비교적 간단 명료하여 그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공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한 경찰개혁의 내용이 고도화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해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 공약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찰청 개혁 방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어떤 속도로 고도화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개혁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하나인 '회복'의 주된 내용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1. 법원 관련 주요 공약

1)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편

-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상당수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5월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신속하게 추진되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8명의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8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추진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의 구현 뿐만 아니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현재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도 15명 정도로 늘리면서 비법조인이 다수를 구성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기존 특정 대학 출신 남성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탈피하여 대법관의 과반수 이상을 다양한 출신과 경력에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법관의 수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대법원의 기능 또한 법률심과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보다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심 역할이 더 강조될 것입니다.

2)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한쪽에 치우쳐 있음)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증거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회와 변호사단체 모두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약집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로 도입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발의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복수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영업소에서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하는 방안, 필요한 사람을 출석시켜 신문하게 하는 진술녹취 방안,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패소판결 등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3)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에 기초하여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에 대한 평가권한을 새롭게 설치하는 법관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 근무평정과 중간평가 등을 관리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사법참여와

민주화를 표방하는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아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가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비법조인도 상당수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변호사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

-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변호사 자문내용의 증거사용이 제한되며, 민사절차에서는 의뢰인과 나눈 전략적 논의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민감한 소송전략이 노출될 위험 없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OECD 36개 회원국 중 변호사비밀유지권이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미 민주당 발의로 변호사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어 도입 가능성이 큼니다.

5)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접근성 확대

- 법관에 의해 독점된 사법기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참여대상재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선고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일부 민사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확대하고, 공개변론 중계를 의무화하며, 판결문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일부 시행 중인 영상재판의 요건을 완화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판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태나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시사점 – 법률 서비스 내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

1) 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확대에 따라 ‘판례 변경’ 늘어날 가능성

- 대법관이 대폭 증원되고 구성도 더 다양화될 경우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 외에 새로운 시각에서 법리를 구성하고 연구하여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하급심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비슷한 사안이라도 판결 결과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전반에서 기존 법리와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판례와 실무의 배경과 한계 등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 업무 및 소송에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2) 소송절차에서 기업 내부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 증가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증거의 제출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되고, 충분한 증거제출이 이루어져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화해가 성립하는 등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으로, 피소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므로 기업의 내부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제조물책임, 환경 소송 등에서 기업의 민감한 내부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 남소(濫訴)를 당할 우려도 있으며,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으로서는 제도의 도입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살펴 업무문서의 생산과 보존 등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민감 사안’에 보다 긴밀한 법적 조언 가능해질 듯

- 변호사비밀유지권이 법률로 보장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되고 소송절차에서 공개될 염려가 없게 되어 기업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비밀유지권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다양한 국면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긴밀하고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정수봉

변호사

T 02.3404.0199

E soobong.jung@bkl.co.kr



권오석

변호사

T 02.3404.6580

E ohseok.kwon@bkl.co.kr



장우성

변호사

T 02.3404.6460

E woosung.jang@bkl.co.kr



XIV. 국제 통상환경 대응

이재명 정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의 탄력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환경 대응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상에 관한 내용은 민주당 공약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1)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2)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통상정책(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융합), (3)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정책 강화, (4) 실용외교와 국제적 위상 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1) 수출시장, 수출품목 다변화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수출시장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i)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ii) 수출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iii) 기술 중심의 무역구조 전환 및 소비재 수출 확대, (iv) 신흥 수출시장 개척, (v)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략품목의 범위나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선거운동 당시의 후보 또는 민주당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포함), 반도체, 방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흥 수출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경제영토 확장 – FTA 체결 확대

실제로도, 비록 구체적인 국가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나 민주당 관계자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 간 FTA로는 일본과의 FTA 협상이, 다자 간 FTA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대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인 보호주의적 흐름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일본과의 FTA 협상 또는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일부 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경쟁력을 증시하는 통상정책 –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융합

1)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통상을 추진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를 현실화할 실행 플랜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정책은 우리 정부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성이 타당하더라도 세부 방안의 정교한 설계와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통상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2)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 일부의 현금 환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액공제 입법안(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대상인 전략산업의 범위나 혜택의 내용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논의에 비추어 보면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 백신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큼니다.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i)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ii) 내수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iii)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강화, (iv)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이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경제안보 정책의 강화

1) 공급망 안정화 정책

핵심소재나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i) 첨단전략산업이나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 강화, (ii)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적극 활용, (iii) 아프리카, 글로벌 사우스, 자원보유국 등과 수출, 투자, 공급망 및 핵심광물 다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v)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후위기, 인권보호 등을 위한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CBAM, RE100, ESG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대응을 밝히면서, 철강 등 탄소다배출 업종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EU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CBAM과 ESG 등 규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물류안보 실현

원유, LNG, 석탄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70% 이상 유지하고, 핵심에너지 수송 선박 및 선박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여 전략물자의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방지하여 핵심에너지 수송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물류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전략물자 수송에 있어 국적선박 확보가 물류안보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고, 전시,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충분한 국적선박의 존재는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도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입 제한은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상생협력 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쟁 제한에 따른 효율성 저하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국제적 위상 제고

1)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

민주당 공약은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한-미간 경제, 군사 등 전방위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는 한-미 동맹을 보다 강조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그 결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와 관세, 방위비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새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관계 설정은 향후 새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미 관계의 틀을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지속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가 한·일 관계의 구축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사 등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중 관계의 발전 지속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소통의 중요성과 한-중-일 3국 협력체제 정례화를 통한 역내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역내 긴장 완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율해 나갈지는 매우 미묘하고 복합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4)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러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러시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관련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정부의 대러 정책에는 러시아-북한 관계에 대한 입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대북관계의 전개에 따라 한-러 관계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적극적 공공외교 등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평화, 안보, 인권 및 민주주의 등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i)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 (ii)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iii)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 접근이 아닌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확산되는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최병일

고문

T 02.3404.0130

E byungil.choi@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